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4.15.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조문, 문구,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조항 순서를 재배치하고자 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6조제3항 문구 정비

- 현행: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나. 상위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6조제3항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 자격 명확화

- 현행: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개정: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정비

- 제9조제2항 “필요 하다고” → “필요하다고”

라. 조항 순서를 일관성 있게 재배치

- 제13조(위원의 해촉)를 제7조(위원의 임기) 다음인 제8조로 배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 참조)

다. 관련부서 : 청년정책과

라. 입법예고 : 2025. 1. 31. ~ 2025. 2. 20.(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6조제3항 ‘협의회 구성’에 관한 문구를 현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표현으로 수정하였고, 동 항의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중 제5호의 청소년보호활동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명시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6호의 학부모 위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외 조항 순서를 재배치하여 조례 흐름에 일관성을 도모하였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지역협의회 구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례의 시의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군·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3.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군·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 첨부 사유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주요 개정사항

- 상위 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 자격 명확화
 - 제6조제3항제5호 :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제6조제3항제6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
- 관련 법(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문구 정비(제6조 제3항)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청년정책과장 박미경